

미래통합당, 또다시 '박근혜 딜레마'



미래통합당이 다시 '박근혜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다. 아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동시에 유산(遺産)으로 남아 있는 탄핵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통합당은 4·15 총선 참패 원인을 진단한 총선백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점이 패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태에 대한 당의 모호한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사과를 포함한 별도 입장 표명을 검토하는 등 '박근혜 흔적' 지우기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 출신 일부 의원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이 다시 '박근혜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의 '박근혜 청산 작업'은 당의 비호감도와 직결된다. 탄핵 사태가 지난 지 3년이 넘었고 그 사이 당명은 새누리당→자유한국

당→미래통합당으로 여러 번 당 간판도 바꿨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내리 연패했다. 이 같은 악순환의 주된 원인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탄핵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례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여전히 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옛 친박계 인사를 중심으로 '박근혜 사면론'이 득세하고 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절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한 악순환 될 것"이라고 썼다.

당 비대위, 탄핵 공개 사과 검토하며 '朴 유산' 털기
옛 친박계, 광복절 사면 요구하며 탄핵 논란 재점화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4일,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 이번 광복절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 사면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사면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보수단체의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광복절 집회를 서울시가 불허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달 전, 고(故)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보다 공익이 더 컸기 때문인가"라며 "광복절 집회 역시 지침이나 인원조건 등으로 조정하면 될 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 이는 마치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준내전 상태인 홍콩에서 코로나 핑계로 6·4 천안문 집회를 금지한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형(刑)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어서 사면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통합당의 '좌클릭'에 반감을 가진 전통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요구임에도 아권에서 '화해와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요구한 배경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반문(반문재인) 세력 결집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당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손해볼 게 없다는 반응이다. 과거 친박 대비박 갈등을 일으키는 단골 소재였던 것과 달리, 지금은 탄핵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면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해묵은 논란을 종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박계 한 중진 의원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과오를 사과하는 것과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탄핵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게 아닌가. 과거에 대통령을 구속해도 단면을 한 전례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수감돼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역시 박근혜 사면을 찬성한다"며 "다만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사면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못이 없다거나 무죄 석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사면 자체가 죄를 인정하지 않아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장마에 휩쓸린 與 후발주자 시름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로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선거 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후발주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주말 호남권에 이어 오는 14일과 16일로 예정됐던 충청권 합동연설회 및 대의원대회를 취소했다. 취소된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상무위원회의만 열고 현장 연설회는 온라인 연설로 대체한 것이다. 전당대회 선거운동도 전면 중단시켰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당의 결정을 대체로 수용하는 모양새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12일 전북 남원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후발주자의 입장에선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는 TV 토론과 연설 기회가 절실한 까닭이다.

며 전당대회 흥행에 적신호까지 켜진 상황이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측은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취소에 강력 반발하며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 후보측은 온라인연설회를 진행하더라도 호남·충청권을 각각 주제로 2회는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뉴시스에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정해서 따르고 통보하는 것은 그렇다"며 "대세가 정해졌으니 그냥 가자는 심신인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관련해 허윤정 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그 시기에 거기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한 사람은 없다"며 "당원을 비롯

호남·충청권 연설회 취소
"인지도 낮은데 이래서야"
김부겸 강력 반발·항의
"특정 후보 유불리 별개"
16일 온라인 연설 체비

해 지도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나 유불리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6일 당사에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온라인 연설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민홍철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차원의 합동 연설회는 어렵더라도 시도당 대의원대회 때 가서 인사할 수 있는 정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며 "후보들간에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안철수, 진중권과 유튜브 대담... "文정부 폭정 해결책 모색"

17일 유튜브 송출
"총체적 난국 상황"
"뜻 맞아 대담 진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담은 오는 17일

12시 안철수 대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정책 등 즉흥적인 팽질식 처방과 오락가락 정책 혼선의 무능함, 직보다 집을 선택하는 참모들의 부도덕함, 사람보다 내 사람을 먼저 챙기는 불공정, 조국 사태에서 율미향 비리 의혹, 성추행, 검찰 무력화, 권언유착

등의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권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교수, 두 사람이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야기된 폭정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두 분의 뜻이 맞아 함께 대담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장소와 날짜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여권 저격수'라 불리는 진 전 교수는 국민의당의 창당발기인 대회, 당이 진행하는 '온(ON) 국민 공부방' 1차 강연 등에서 연사로 나선 바 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